

Global Goings~on

* 주요국의 보건복지 정책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최근 연구 자료를 선정하여 번역 정리한 글임.

Mental health and education decisions

■ Cornaglia, F, Crivellaro, E. & McNally, S.(2015). *Labour Economics*, 33. pp.1-12.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은 국제적으로 증가해왔다. 아동시기의 낮은 정신건강은 삶의 후기에서의 낮은 정신건강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삶의 기회들에 대해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져왔다. 정신건강 문제들은 교육의 양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고용, 소득, 다른 결과들에 대해 차례로 영향을 미쳐, 인적자본 축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낮은 정신건강과 낮은 교육적 결과는 영국의 경우에 특히 흥미로웠다. 영국은 아동 복지과 노동시장 초기 이탈을 모두에서 낮은 국제적 순위에 위치해 있다. 이 논문은 영국의 십대들의 최근 코호트에 대한 대규모의 종적 연구를 사용하여 이 이슈를 연구한다. 이 논문은 낮은 정신건강의 측정치를 도출하기 위해서 General Health Questionnaire을 사용한다. 이 연구는 낮은 정신건강의 위험에 처할 위험과 교육적 결과 사이에 큰 부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이 과정에

서 의무교육을 끝내기 이전의 평가 결과와 어린 나이에 교육 받지 않고 근로나 훈련에 있을 확률을 고려하였다. 이 결과들은 소녀들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나타났으며, 정신건강 측정수단의 다른 요소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낮은 정신건강의 징후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의사들과 정책입안자들에게 중요하다. 이 논문의 주요 메시지는 정신적 고충이 낮은 교육적 수준과 초기 이탈율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며, 청소년 시기의 정신건강 문제가 성인의 정신건강에 잠재적인 장기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기존 연구들에 기여한다.

Cohort size and youth earnings: evidence from a quasi-experiment

■ Morin, L. P.(2015). *Labour Economics*, 32. pp.99-111.

경제학자들은 코호트 크기가 젊은 세대의 경제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광범위하게 연구해왔다. 코호트의 크기가 1년 간격으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들은 코호트 크기(일

반적으로 8~25세)의 장기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전략의 한 가지 문제점은 인구학적 변화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관찰되지 않는 추세들과 코호트 크기의 영향을 분리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면서 이 논문은 Canadian Labour Force Surveys와 2001년과 2006년의 Canadian Census를 사용하여, 중요한 노동공급 충격이 젊은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Ontario의 13학년의 폐지는 Ontario의 노동시장에 동시에 들어가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매우 큰 코호트를 발생시켰으며, 이것은 노동공급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다. 또한 이는 이 논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 관찰되지 않는 추세와 혼동될 수 있는 공급 충격 없이, 코호트 크기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한다. Census의 결과들은 공급 충격의 영향이 통계적이나 경제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 공급의 충격은 주당소득을 5%에서 9% 낮추었다. Census로부터 도출한 이 연구의 결과들은 고등학교 졸업의 약 6개월 이후에 측정된 공급충격이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LFS의 결과들에 의해서 지지된다. 그러나 코호트 크기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주로 임금분포에서 하위에 속한 그룹에 집중되었다.

The inequality-growth plateau

▮ Daniel J. Henderson, Junhui Q, Le Wang.
(2015). *Economics Letters* 32, pp.17-20.

저자가 논문의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불평등과 경제성장 간 관계에 대한 문제는 그 중요

성이 매우 높지만, 아직 의견이 분분하고, 명확하게 정의된 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Kaldor (1995)와 같은 고전학과(The classical)의 경우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이롭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고전학과(The neoclassical) 접근은 경제발전에 불평등이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상반된 두 시각과는 다르게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불평등이 경제 발전에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영향은 필연적으로 (necessarily) 이롭지 않을 수 있으며(Battisti et al, 2013), 비선형적인 것(Galor and Moav, 2004)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연구와 유사하게 Forbes(2000), Persson and Tabellini(1994)등과 같은 실증연구 역시 여러 시각이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불평등과 경제성장 간 관계를 연구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선형 구조를 설정하고 최근 이론적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잠재적인 비선형관계 (potential nonlinear relationship)를 무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Henderson et al.(201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비선형성을 고려하는 것은 실증적으로 관련 변수들을 결정하고 성장 과정의 주요 원리를 알아내는데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Banerjee et al(2003)의 연구결과는 (비록 저자들이 Forbes(2000)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용하여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료의 패널구조를 고려하지 않아, 누락변수 편이의 잠재적인 원천인 관찰되지 않은 시불변적인 이질성을 제거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비선형 혹은 준선형 접근(quasi-linear approach)으로서도 그 의미가 충분히 인식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Irdian(2005)의 자료를 적용하여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온 모수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불평등-성장 간 관계에서의 비선형적인 증거를 도출하였으며, 더욱이 이들 두 관계에 있어 안정기(정체기, plateau)를 발견하였다. 즉, 불평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급격하게 이루어지다가 어느 순간 불평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다시 불평등 증가 시 경제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다. 이러한 패턴은 인위적인 곡률을 고려하는 모수적 접근에 의해서는 완전히 가리워지는(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단순할 수도 있지만, Hsiao et al(2007)에서의 모수적 함수의 유효성을 검증한 부분은 저자들이 비선형적 접근 방식을 견지한 것을 더욱 견고하게 해 주는 분석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검증의 귀무가설은 모수적 함수모형이 정확하게 구성되었다는 것이며, 부트스트랩 절차에 의해 검증 분석을 수행하였고, 5% 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비모수적 모형 설정이 더 좋은 것임을 이끌어 냈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증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비선형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부분이다. 특히 모수적 관계 설정 시 불평등의 감소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본 연구인 비모수적 방법론 적용 시에는 불평등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에만 경제성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불평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모든 정책은 무조건 급격한 경제성장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단지 불평등이 매우 크게 감소하는 경우에만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반면,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친 성장정책

(pro-growth policies)은 정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을 때 이로 인해 불평등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효과적일 수 있다. 아울러 선형, 비선형 분석에 대한 비교 그림과 기타 자세한 설명은 논문을 참조하면 된다.

Family resources as mediators in the relation between divorce and children's school engagement

■ Nele Havermans, Sarah Botterman, Koen Matthijs.(2014). *The Social Science Journal*, 51. pp.564-579.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가정 내 부모의 이혼(divorce)과 자녀의 학교생활 참여(children's school engagement)에 대한 관계에서 가족 자원(인간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의 조정(매개) 역할을 논하고 있다. 논문의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연구의 배경에는 인구, 사회 발전과 이혼율 등 증가로 인한 핵가족화 진전이 자리 잡고 있다. 몇몇 선행연구(amato, 2010 ; amato & james, 2010)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혼 가정이 증가함으로써 자녀들은 일반 가정보다 덜 부모의 지원과 관심을 받게 되어 학업의 성취도가 낮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이 낮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저자는 특히 이혼이 자녀의 낮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Berlin, Furstenberg & Waters(2010)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교육은 가장 큰 의미를 갖는 사회 내 사회적 균열(social cleavages) 중 하나

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즉, 고학력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학력이 낮은 이들의 경우 직업지위(occupational status)와 소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가 주로 이혼 이후의 자녀의 학업성취도나 학교 생활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혼 가정의 자녀가 그렇지 않은 일반 가정의 자녀에 비해 조기 중퇴율(early school drop-out)이 높고, 성적은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반면, 저자는 자신들의 연구가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통해 가족 요소의 결핍(deprivation) 측면에서의 명확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고,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측면의 가족 요소를 매개로 하여 이혼의 간접적 영향까지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을 차별성으로 부각하고 있다. 또한 실증분석의 공간적 범위로 조이혼율(crude divorce rate)이 높은 반면, 학교 참여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낮은 벨기에를 설정한 것 역시 명확한 분석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차별성으로 언급하고 있다.

분석모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leuven 대학에서 조사된 청소년, 가족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학교-학생의 2단계 표본 추출 전략을 수행하여 최종적으로는 벨기에 플랑드르(Flanders) 지역 학생의 1% 수준인 44개의 2차 학교 7,035명이 추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에 적합한 데이터 구조를 구축하였다. 독립변수는 호기심, 지식수준 향상, 시간적 손실, 개발, 미래를 위해 중요하지 않음, 쓸모없음 등과 같은 학교 참여 변수이고, 종속변수는 부모의 이혼과 관계된 여러 변수로서(결혼하였고

동거, 동거하나 결혼하지 않음, 결혼 후 이혼, 동거 후 비동거 등)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 자원은 독립변수이자 매개변수로서 인간,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존경, 시간을 함께 보내고 즐거움, 비밀을 공유함,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음, 감사함, 배움 등 여러 변수를 설정하였다. 특히 엄밀한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완전정보최우추정법(FIML :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하여 결측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자 시도한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저자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Brown(2010)이 나타난 바와 같이 완전정보최우추정법의 경우 다변량 정규분포(multivariate normal distribution)를 통해 결측치를 완전히 아니면 적어도 부분적인 확률분포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부모가 이혼함으로써 자녀의 학교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변수 중 부모-자녀 간 (친밀한) 관계, 부모 간 갈등, 가정의 경제적 문제에 의해 매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와 기타 분석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논문에서 참조할 수 있다.

Evaluating the Possible Impact of Pension Reforms in Elderly Poverty in Europe

■ Aaron Grech, (2015). *International Journal of Finance & Economics*, pp.68-87.

본 연구는 '연금제도의 관대함(generosity) 측면에서 연금 개혁의 영향'에 대해 기존의 연구를 보완하여 제시하고 있다. 특히 '연금자산(pension

wealth)이라는 지금까지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지표를 사용하여 평가하고 있는데, 이 지표의 장점은 단순히 은퇴시점이 아닌 은퇴함으로써 이전되는 총 연금소득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초기의 연금 혜택의 가치 뿐 아니라 혜택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의 변화의 영향, 임금상승률 이하의 물가연동제도로 인해 장기에 걸쳐 제공되는 국민연금의 혜택의 상대적 가치가 상당부분 줄어드는 등의 효과도 포착하고 있다. 또한 연금제도의 개혁이 저소득층 또는 불안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악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연금자산의 추정치는 다른 소득수준을 가진 사람들의 범주에 적용하고, 연금의 혜택에서 당사자가 일정부분 부담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더 대표성을 띠는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로 국민연금의 관대함은 연금제도의 개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지 않는 한 상당부분 축소되어왔다는 연구조사 결과를 확인해주고 있다. 또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국한된 연금에 초점을 둔 연구결과는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슬로바키아에서는 저소득자가 연금 이전소득에 의해 겨우 가난함을 벗어나는 경우는 실제적인 직업 기간을 고려해보았을 때 가능하며, 연금 수급자의 가난은 지금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게다가 기여에 따른 수급혜택으로의 이동은 심각한 성불평등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정치입안자들은 이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최소한의 연금제도의 향상만을 보장할지도 모른다. 즉,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참여의 증가가 관대함의 축소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정부가 노동시장 참여

여건의 개선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Is There a Role for Social Pensions in Asia?

■ Armando Barrientos, (2014), *International Journal of Finance & Economics*, pp.8-20.

본 연구는 사회수당형연금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정책적 trade-offs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현행 관례를 살펴보면, 사회수당형연금은 노령 인구의 재정적 취약성을 다루는 정책의 연장선으로 묘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수당형연금제도의 4가지 주요 유형인 보편적 사회복지(general social assistance), 노인 대상의 사회복지(social assistance with old-age component), 선택적 또는 자산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수당형연금(selective or means-tested social pensions), 범주적 사회수당형연금(categorical social pensions)을 다루고 있다.

사회수당형연금의 3가지 주요 추정치는 '빈곤의 감소(poverty reduction), 장려책(incentives), 예산(budgets)'이다. 분석은 2가지 중요한 정책 포인트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하나는 사회적 보조와 사회수당형연금의 비교 가능한 이점이고, 다른 하나는 각출 연금(contributory pension)제도와 비각출 연금(non-contributory pension)제도간의 연계이다. 첫 번째 중요한 정책 포인트는 각출연금제도를 도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저소득·중간소득 국가에 중요한 것이다. 두 번째 중요한 정책 포인트는 잘 발달된 각출연금제도를 갖춘 지역의 중간·고

소득 국가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연구조사결과에 따르면 사회수당형 연금과 각 출연금프로그램을 결합하는 것은 부담에 대한 유인을 유지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잘 고안된 각출연금제도의 존재 하에서는 보편적인 사회수당형연금제도가 특히 저소득

근로자계층에서는 부담에 대한 유인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 나이가 노령 인구의 소득보장제도를 보장하는데 있어 여러 정책적 옵션이 가능하고 이는 각 국가의 특정 조건에 따라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